



정세균 의장 “협치 합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통 공약·무쟁점법 처리부터 하자”

정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62건 신속처리 합의

김이수 임명동의·5·18 진상규명 국조 설치 등엔 이견

여야는 28일 각 당의 공통공약 법안과 무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러나 핵심 현안인 5·18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또는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문제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위한 표결처리 문제에 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공통공약 법안 62건에 대해서는

여야 정채위원장이 이후 법안처리를 어떻게 할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별로 상향 점검 책임자를 두고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설치하기로 한 인사청문 개설회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정의장은 “여당에서는 표결처리에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합의가) 번

복됐다”는 입장이다”며 “정의장에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말씀과 함께 ‘나도 많이 참았다. 나로서도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통과를 담담하지는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정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사”라며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결정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정 협의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정의당을 빼고서라도 시작을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이 처음 제안한 것인 만큼 정의당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회동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으나 보수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거나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이점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대략의 틀에 교감했으며, 이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

민주 본격 지방선거체제

선거기획단 구성... 단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춘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안을 보고했다.

기획단 부단장은 김민기 수석사무부총장, 간사는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이 맡았다. 대변인은 백해련 당 대변인이 선임됐다. 위원은 ▲진선미 적폐청산위 간사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위원장 ▲김해영 정책위 부의장 ▲송기헌 법률위원장 ▲임종성 조직사무부총장 ▲조승래 원내부대표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 등이 위촉됐다.

이번 기획단 구성은 정당발전위의 지방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문제는 기획단에서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기획단은 앞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 해석,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세부 시행규칙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원주 수석대변인은 “당연적으로 들어가야 할 당직자들이 들어갔다”며 “사무총장과 조직, 전략, 정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여성 3명, 약간의 지역 배분이 추가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단 구성은 11명인데 호남이 빠졌다”며 추가인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서울, 대구, 대전, 충·남북 등 시도당 사무처장 인사를 진행하고 시·도당 실무조직을 정비했다. 나아가 앞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청와대 파견 등으로 인한 사고 지역위원회 문제를 처리하는 등 지방선거를 대비한 조직 정비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직 평가위원회도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준비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당의 방침과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기국회에 불똥 튈라”... 민주, 安 대야 강경발언 ‘촉각’

선명 야당 주창...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견제 커질까 긴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임 후 대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안 대표가 지난 27일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겠다”고 포문을 열자, 민주당 내에서는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나 개혁 입법 추진에 불똥이 튈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의 대치가 심해진다며 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다는 점을 앞세워 국민의당이 국회 운영에 협조하도록 일찌감치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안 대표의 사실상 대표 행보 첫날인 28일 공개 발언을 통해 국민의당의 입법협조를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에게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 또 안 대표가 저의 바로 옆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등 저와의 인연도 깊다”며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살리고 성과를 내는 정치를 복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안 대표도 정부나 여당과 방향이 같으면 전폭 지지하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국민도 깜짝 놀라고 정부와 여당도 기분 좋게 긴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의 뒷받침 호남에서 민주당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안 대표가 반대 일변도로

나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물밑에서는 이전 국민의당 지도부보다는 확실히 대야 견제가 강해질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안 대표의 출마 이유 자체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는 ‘선명 야당’을 만드는 것이었던 만큼 대야 공세가 한층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침입주’인 안 대표가 당을 이끌게 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당 지지율도 소폭 올라갈 여지가 생겼다”며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도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원내 관계자도 “원활한 정기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등과의 협치가 필수”라며 “안 대표 선출 이후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노동시간 단축’ 줄다리기

환노위소위, 유예기간 이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개정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견해차가 큰 여러 쟁점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소위원장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50~299인 기업, 5~49인 기업 등 3단계로 나눠서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군별 유예기간을 얼마로 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는 29일에도 소위를 열어 나머지 쟁점 및 수당지급 방식에 대한 쟁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추미애, 야당대표 릴레이 만남

내달 6일부터... 정기국회 앞 대야 관계 개선 모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대표들과 연쇄 회동에 나선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대표는 다음 달 6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만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같은 달 8일에는 바른정당 이해훈,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의도 한 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한다.

새로 선출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경우 이날 예방이 잡혀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전전히 일정을 잡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각 당의 체제가 모두 갖춰진 만큼, 추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스스로 주창한 ‘공의 협치’를 모색하기 위해 야권 대표들과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차원인 셈이다.

추 대표는 앞서 전날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내에서 주제 하나하나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협치는 속 좁은 협치”라며 ‘통 큰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추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만남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정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일반물건

-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 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담양군 담양읍 테미널 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성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성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서구 치평동 소각정 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일층 가능 매매가 17억
-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 ▶서구 마북동 연화아파트 인근 126평 매매가 5억2천
-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인근 46.2평 매매가 3억
- ▶장성군 원원면 학림리 전 도로점 토지 200평 매매가 1억5천만원
-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 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토지

-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원로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공장

-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 ▶광산구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420,000,000
-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노 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